

## 요약

2022년 1월,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는 산호세 거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하였음.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총기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촉진할 뿐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총기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총기 소유에 대한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에도 위배 된다는 주장도 있음

-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 재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월,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San Jose City)에서는 산호세 거주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임<sup>1)</sup>
  - 또한 산호세시 거주 총기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25달러)을 지정된 비영리 기관에 총기 피해 감소를 위한 비용(Annual Gun Harm Reduction Fee)으로 납부해야 함
  - 산호세 시의회는 이번 총기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도입 배경으로, 총기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공공 보건 및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재정 부담이 높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 특히 총기사고에 수반되는 공공 서비스 지출(응급 경찰·의료진 출동 비용, 사고 조사비용,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재정부담을 주민들(총기 비소유자)에게 오롯이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힘
    - 총기사고로 인한 산호세시의 공공 서비스 지출 비용은 연평균 약 3,970만 달러로, 가구당 151달러이며, 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4억 4,200만 달러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함<sup>2)</sup>
  - 과거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다수의 주에서 여러 차례 총기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매년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산호세시의 법안 통과는 의미가 큼
    -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매우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총기 관련 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 등으로 매년 법안 통과가 실패되었음
- 산호세 시의회는 이번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통과로 인해, 총기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1) Forbes(2022. 1. 26), "San Jose Passes Nation's First Gun Liability Insurance Law - Here's What It Means"

2) <https://sanjose.legistar.com/View.ashx?M=F&ID=10508335&GUID=F4AC493E-905E-42E8-A69E-8ADE914F4BD2>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이행 보장 및 잠재적 가해자인 총기 소유자의 배상책임 이행의 부담 완화 효과 외에도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 총기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하는 측은 보험 가입 의무화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총기 소유자의 안전 의식 향상 및 안전 추구 행동을 유인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함
  - 산호세 시의회는 미국의 운전자보험 의무화 규제 도입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크게 감소해왔다고 덧붙이면서,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함

○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총기난사 등 범죄·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총기사고는 보험보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총기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함

- 미국 전국총기권리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Gun Rights)은 총기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통과 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적 권리에 위배 된다고 주장함<sup>3)</sup>
- 또한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우발적인 또는 자기방어를 위한 총기사고일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고, 고의적인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함
  - 미국에서 발생한 전체 총기사건 중 비고의적인 사고는 1/3을 차지함
- 한편 보험 가입으로 위험이 보험회사에 이전되면서 오히려 총기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총기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표 1〉 미국의 총기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 주요 내용

구분	찬성	반대
도입	① 공공 보건·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큼 ② 총기사고에 따른 공공 서비스 지출 비용이 높아 일반 주민(총기 비소유자)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됨	① 총기 소유에 관한 헌법적 권리에 위배 됨
효과	① 총기사고 발생 시 신속·적절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함 ② 잠재적 가해자인 총기 소유자의 배상책임 부담이 완화됨 ③ 사전에 총기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① 고의적인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총기사고 방지 효과가 미미함 ② 보험 가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등 미국에서 비극적인 총기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총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산호세시와 같이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state) 또는 시(city)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은 이러한 규제 변화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총기 소유자의 위험 행태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 등 계량화 기술 및 관련 보험상품 개발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임

3) The New York Times(2022. 1. 26), "San Jose Moves to Require Gun Owners to Have Insurance and Pay Annual Fees"